

거미줄 규제에 묶인 빅데이터... ‘개·망·신法’ 통과 촉각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
행안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추진”
과기부 “빅데이터3법 조속 통과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업무보고에 나선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빅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이날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나섰다.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 기술의 선제적 공공서비스

도입, 빅데이터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 질의응답에서 “빅데이터 3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에 부탁했다.

현재 국회에는 빅데이터 3법(데이터 경제 3법)이 묶여있다. 빅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오프라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 이번 3법은 각 분야에서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 데이터의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정립,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명확히 해 빅데이터 분석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데이터 사업에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정보유출 신고시 감독·조사 기관도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기업은 다중 규제를 받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은 ‘미래의 석유’로 각광받지만, 한국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빅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시장조사업체 KRG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성장률은 2016년 31.1%에서 2017년 25.0%로 떨어졌다. 2018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업계는 규제에 따른 성장 둔화를 우려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기술융합·빠른속도·사회변화”라며 국회의 입법방식이 경직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

다. 규제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회도 4차산업혁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입법 방식은 신기술·신산업을 즉각 포섭할 수 있는 입법 체계 전환이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규제가 과거 기술수준에 기반했기 때문에 혁신기술 상용화와 혁신제품 시장출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입법 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한편 당정은 빅데이터 규제 완화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에 빅데이터 3법 등의 통과를 설득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겨냥해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법안이 정쟁과 무관한 만큼 꼭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상장사, 외형만 늘고 실속 못 챙겨

코스피 540곳, 매출 4.8% ↑ 순익 6.7 ↓
코스닥 911곳, 영업익·순익 모두 감소
“4분기부터 반도체 실적 하락한 탓”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됐지만 반도체 부문 실적이 4분기부터 급감하면서 영업이익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고 순이익은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순이익은 줄었다.

3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40개사(금융업 제외)의 연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은 1894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6%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157조7000억원으로 0.32% 늘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108조원으로 6.72% 줄었다.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만 늘고 영업이

익과 순이익 모두 줄었다. 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분석한 911개 코스닥 기업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6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9%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8조4000억원, 4조3000억원으로 각각 11.58%, 8.66% 감소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을 합친 상장사 순이익은 112조3000억원으로 전년의 120조5000억원보다 6.8% 줄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세계 경기 성장세가 둔화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교역량이 급감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다”며 “특히 4분기부터 반도체 실적이 크게 하락한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제작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작년에도 그 이상이나올 거라고 당초 예상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며 “반도체 부문 이익이 4분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이익지표도 전년보다 악화됐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8.32%로 전년보다 0.37%포인트, 매출액 순이익률은 5.70%로 0.70%포인트 낮아졌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도 영업이익률 4.98%, 순이익률이 2.55%로 각각 0.92%포인트, 0.38%포인트 하락했다. 정보기술(IT)·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이익 성장세가 풀리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코스피 상장사 전체 매출 중 12.8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전체 매출액은 1650조원으로 전년보다 5.2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98조8000억원으로 4.57%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순이익도 63조6000억원으로 13.51% 감소, 삼성전자 포함 시보다 감소율이 약 2배로 심해졌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보기술(IT)업종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연결기준으로 IT업종 344개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4.21% 증가했고 순이익은 18.0% 늘었다. 나머지 업종 567개사의 매출액은 4.95%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22.52% 줄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文 “4·3 해결,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

페이스북에 ‘진상규명’ 글 게시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제주 4·3 71주년인 3일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



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 4·3은 여전히 불헛살 아래 서 있기 부끄럽게 한다”며 “진혼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제주도민의 강인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추념식에는 이낙연 총리께서 참석했다”라며 “제주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정부의 마음을 잘 전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3일 오전 10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4·3평화재단관계자와 유족 등이 참석해 열린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각 정당 대표들이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김병준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노동부, 사내 하청업체 안전실태 점검

고용노동부는 4월 한 달 동안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특히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0일에는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의 운반기(컨베이어) 협착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0개소 및 대형 사업장 300개소 등 총 400개소를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세밀히 감독한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전체의 40% 위반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조치

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상반기 일제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발주 공사를 위주로 추가 점검을 하는 등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與野 “4·3특별법 통과에 최선” 한목소리

여야 5당 대표가 3일 제주 4·3 71주년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를 위로했다. 배·보상 등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기대를 모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 4·3특별법) 가능한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대표는 “단독으로는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당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황교안 자유한

국당 대표도 “4·3 사건은 다신 반복돼서는 안되는 비극적 사건”이라며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정신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를 모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4·3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석대성 기자